주간 통일정세

2015-37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Ⅰ.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Ⅲ.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KINU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15-37(2015.09.14~09.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우) 137-756
전화 (02) 2023-8000 전송 (02) 2023-8209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Ⅰ.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북인권법안, 전쟁국면으로 되돌리려는 도발"(9/16,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6일 대변인 담화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남조선 국회가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해내려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되돌려세우는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때 남조선 국회가 북인권법 조작 소동에 광분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라고 핏대를 세움.
- 이어 "북인권법을 떠들어대는 그 입으로 그 무슨 남북 국회 회담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화 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합의이행과 관계개선,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치졸한 여론 기만극"이라고 지적함.

■ 북한, 국회 북인권법안 합의 또 비난…"남북관계 발전에 장애"(9/18,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18일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인권법안이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는 정치적 도발이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과 지향에 대한 전면적은 도전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안이 "북남관계 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면서 "우리 천만군민은 북인권법을 조작하려는 적대세력의 도발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북인권법안, 전쟁국면으로 되돌리려는 도발"(9/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중앙위원회는 1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국회와 당국의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인민의 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해치려는 용납 못 할 도발 망동"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북남 사이에 화해와 평화의 새 국면이 열리고 있는 때에 남조선 국회가 벌이는 북인권법 조작 책동은 우리 노동계급을 치솟는 분노로 끓게 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우리 공화국에는 인권문제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남조선 위정자들은 근로 인민의 생지옥인 제 집안의 인권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헐뜯음.

■ 북한, 남한 북한인권법안 제정 추진에 강력 반발(9/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청년근로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요람을 해치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안을 비난했다고 보도함.
- 대변인은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모략소동에 발광하는 것은 실로 가소롭고도 파렴치한 망동이며 추악한 대결적 정체만을 낱낱이 드러낼 뿐”이라고 강조함.
- 대변인은 또 “북 인권법을 조작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는 보도에 접한 우리 500만 청년전위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북관계 개선하려면 군사적 적대행위 걷어치워야”(9/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논평에서 “남조선에서 최근의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에 저촉되는 엄중한 움직임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부터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함.
- 통신은 남북 고위당국자 긴급 접촉에서 합의를 이룬 후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남한이 미군과의 군사 훈련,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 등을 벌이고 ‘북핵 위협’ 발언으로 북한의 전략적 노선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고 비난함.
- 통신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와 북남관계 개선을 확약하는 중대한 합의를 이룩하고서 돌아앉아서는 외세와 함께 대결행위에 매달리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정세 안정 분위기에 저촉되는 위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함.
- 이어 “온 민족이 남조선 당국의 처신을 지켜보고 있다”며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안정 분위기를 귀중히 여기며 북남관계 개선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북한, 통일부 국감자료 비난…"남북합의 왜곡"(9/1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북남합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눈꼴이 시게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매체는 "북과 남이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떠드는 것은 무례한 행위"라며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만인데도 통일부가 시인이니 사과니 하며 마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합의를 뒤집는 망동"이라고 핏대를 세움.
- 그러면서 "통일부가 합의까지 뒤엎는 대결적 언동을 쏟아내 북남관계 개선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사실을 왜곡하는 나쁜 습성에서 탈피해 우리의 성의있는 태도에 발걸음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북한,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 비난…"이산상봉 앞두고 불장난"(9/1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우리 군이 전날 진행한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에 대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남조선의 군부세력이 화약내를 계속 풍기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음.
- 매체는 "전쟁놀음을 벌이면서 합의 이행을 외우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며 "북남 사이에 화해와 협력, 대화와 접촉들이 마련되고 있는 때 군부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난동에 치솟는 분노와 강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비난함.
- 매체는 "관계 개선 분위기와 불장난 소동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남조선 호전세력들이 불장난질을 일삼으며 이번 합의를 깨뜨린다면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남북, 오늘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9/15, 연합뉴스)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가운데 남북이 15일 낮 12시 30분께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남북은 의뢰서에 적힌 사람들의 생사 확인 등을 한 뒤 다음 달 5일 결과 회보서를 주고받기로 했으며 한국적십자회는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고서 다음 달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의 합의에 따라 10월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양대노총에 내달 '통일축구대회' 개최 제의(9/17, 연합뉴스)

- 1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16일 양대노총에 팩스를 보내 다음 달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평양에서 열자고 양대노총에 제안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북측은 서신에서 "내달 하순에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30일에 개성에서 갖자"며 "북과 남의 우리 노동자들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 사이의 합의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이들 3개 단체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는 "순수 사회문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축구 이외의 다른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대 노총의 방북 신청을 불허했다고 뉴스는 전함.

■ 남북교회 대표 내달 평양서 회동(9/18, 연합뉴스)

-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에 따르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 조그련)의 초청으로 세계교회협의회(WCC) 및 교회협 대표들이 다음 달 24일부터 7일간 평양을 방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 실행위원회를 연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WCC에서는 장상 WCC 공동회장과 피터 그루브 국제위원회 국장 등이, 교회협에서는 김영주 총무가 평양을 방문해 조그련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민족문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 수 없고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갈 수 없다'며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고 주장(9.14,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 관련 '통일문제를 외세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에 대한 우롱이며 대화상대방인 동족에 대한 도전'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의존책동을 걷어치우고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협의·해결해야 한다'고 주장(9.15,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 재개관식의 발언(법통이 시작된 곳, 독립투쟁의 근거지 등)에 대해 '반일투쟁 역사를 외곡해서라도 사대와 매국으로 얼룩진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해 보려는 남조선 당국의 유치한 계책'이라고 비난(9.15, 중앙통신·노동신문)
- 통일외교 및 대통령의 서울안보대화 개막식 발언을 "체제통일 흉계, 통일문제 청탁놀음"이라고 반복 비난 및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강조(9.16, 중앙방송·평양방송)
- 우리 軍의 미사일(사거리 800km) 시험발사 검토 관련 '동족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흉심'이라며 '동족을 해치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군부호전세력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9.17, 중앙통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 시사(9/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우주 개발은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나라가 통신 및 위치측정, 농작물 수확고 판정, 기상관측, 자원탐사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 있다"며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함.
- 그러면서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노동당 창건 일흔돐을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의 위성발사 역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고 힘줘 말함.

■ 북한 "핵뢰성으로 대답할 준비"…핵실험 시사 해석도(9/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민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제도 전복을 내놓고 추구하는 보다 노골적이고 비열한 수법들로 심화되고 있다"고 비난함.
- 그는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강조하고 "다시 말하여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덧붙임.
- 원장은 특히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재침 야망 묵과 않겠다"(9/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며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이번 일본의 안보법제 제·개정을 두고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힘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배 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추악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우리는 일본이 또다시 재침의 시퍼런 칼날을 입에 물고 달려드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위험한 침략 책동들에 대처해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대변인은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재침 야망에 사로잡혀 전쟁법을 끝끝내 만들어냄으로써 또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한반도 핵위기 사태 몰고온 진범은 미국"(9/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미국은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제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항시적으로 격화시켜온 평화의 파괴자,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침.

- 신문은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을 총체적인 침략적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이 지역을 틀어쥐는 것을 세계 제패의 관건적 고리로 보고 있다”면서 “여기서 주요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조선반도”라고 강조함.
- 논평은 또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전쟁 소동에 전쟁 억제력으로 초강경 대응하지 못하였다면 조선반도는 이미 전쟁의 불바다 속에 빠져들었을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핵 개발을 정당화함.

■ 북한, 핵실험 의지 재확인…“당당한 자주적 권리”(9/17,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7일 ‘누구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에 대해 시비할 수 없다’는 글에서 “최근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억제력 강화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과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힘.
- 매체는 이어 인공지구위성발사, 핵시험 의지 천명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비판이 오히려 ‘도발’이라며 “누구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공평한 이중기준을 우리는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함.
- 매체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어떤 도발과 전쟁 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며 도전해 나설수록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로켓 발사 강행 시사…“인공위성은 자주권의 상징”(9/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인공위성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의 상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평화적 우주개발을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판함.
- 이어 “인공위성은 공화국의 불굴의 넋이고 강성 번영에로 향한 무한대한 힘의 분출이며 자주권의 상징”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우주과학 연구와 실용위성 제작, 그 발사와 관제는 철두철미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며 우주공간의 평화적인 이용을 유엔 성원국들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목소리를 높임.
- 북한은 “위성 발사는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발전 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며 “우리에게는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올리는 것을 예견한 국가우주개발 계획이 있다"고 설명함.

■ 북한 "핵무기 사용 여부, 미국 행동에 달려있다"(9/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우리의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선 민족의 안전을 지켜내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구태여 언급한다면 그 모든 것은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위협함.
- 신문은 최근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자살 행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핵 공포증에 걸린 약자의 허장성세"라며 "자살이란 말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 해당하는 소리"라고 비난함.
- 신문은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질량적으로 장성강화됐다"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그 어떤 요격미사일로도 불규칙적인 비행을 하며 기만 탄두까지 사용하는 우리의 탄도미사일을 명중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평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미 본토와 태평양·남조선의 미군기지들은 이미 우리의 첫째 타격목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전쟁을 도발한다면 그것은 곧 자멸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꿈에서 깨어나 이제라도 한시바삐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

다. 회담 관련

■ 왕이 "유엔결의 이행의무 있다"…'도발강행' 북한에 경고(9/19,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팡페이위안'(芳菲苑)에서 9·19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열린 북핵 세미나에 참석, "6자 회담 구성원들은 모두 유엔 헌장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또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국은 반도(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동북아 평화안정의 대국(大局)을 어지럽히려는 그 어떤 생각과 시도도 실패할 것이며 결코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함.

- 왕 부장은 또 "'유관 각방'(북한 등)은 마땅히 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하고 일치된 목소리로 재다짐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보유'를 고집하는 상황도 겨냥함과 동시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오랫동안 직면해온 '거대한 군사적 압력'을 중시하고 북한의 '합리적인 안전 우려'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함.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교도통신 "北, 요코타 메구미 부모 평양방문 日에 타진"(9/15, 교도통신)

- 작년 여름 이후 북한이 '메구미 씨 부모에게 북한에서 손녀(김은경·메구미가 북한에서 낳은 딸)를 만날 기회를 주겠다'며 초청 의사를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IAEA "北 추가핵실험 시사, 엄중한 우려로 자제촉구"(9/19, 연합뉴스)

- IAEA는 14~1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59차 총회에서 북한의 핵활동과 핵실험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해당 결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3개국이 공동 제안,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65개 IAEA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됐으며,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핵실험)'을 천명한 지난 3월 30일 성명과 후속 성명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가지고 추가 핵실험의 자제를 촉구함.
- IAEA가 언급한 후속 성명에는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전함.
- 결의는 또 영변 핵단지의 5MW 원자로 가동 정황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 경수로 부지 내 건설 활동, 황해도 평산 지역에서의 우라늄 채광 및 추출활동 등을 거론하며 이들 활동이 "명백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함.
- 결의는 아울러 북한이 핵 증강 정책을 포기하고 핵물질 생산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영변 핵시설의 재조정·확장을 위한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도 촉구하면서, 더불어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공약을 존중하고, 해당 공약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도 요구함.
- 특히 5MW 원자로, 농축시설 등 영변 내 모든 핵시설이 '조절변경'돼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장의 문답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으며, 결의는 IAEA가 핵시설 사찰을 위한 북한 내 복귀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도 지지를 표명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안성립 전제, 자위대의 새로운 부대운영에 관한 내부자료 先 작성' 관련 "안전보장관련법안은 군국주의와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전쟁법안"이라고 '즉각 철회, 군국화책동 중단' 촉구(9.16, 평양방송)
- 양형섭, 9월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미얀마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9.17, 중앙통신)
- 리수용 외무상, 9월 17일 작별 방문한 駐北 인도대사와 담화(9.17,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월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北 창건' 67주년 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단장 : 홍인흠「총련」감사위원장)과 담화(9.18,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백두산발전소 건설현장 현지지도…완공 독려(9/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동지가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김정은 동지는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줬다"고 보도함.
- 통신은 "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10년간 진행해온 것보다 더 방대한 건설 과제를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해 제낌으로써 수력발전소 건설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고 치켜세움.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세상을 놀래우는(놀래키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했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 영웅들"이라며 발전소의 이름에 '영웅'을 넣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했다고 전함.
- 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설현장 방문에는 최룡해 당 비서와 조용원 당 부부장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나선시 시찰…홍수 피해 복구작업 점검(9/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큰물(홍수) 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나선시 수재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며 "직접 피해복구 현장을 돌아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18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일환 당 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이 수행했으며,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 국장, 강표영 등 나선시 피해복구전투 지휘사령부 지휘관들과 김용진 내각 부총리는 현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맞았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상장→중장 강등(9/18,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군에서 주로 대외 업무를 관장해온 강표영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 부부장이 상장(별 세 개)에서 중장(별 두 개)으로 강등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조선중앙TV가 1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홍수 피해를 본 나선시를 시찰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내보낸 영상에서 강표영은 중장 계급장을 달고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뉴스는 인용해 전함.

■ 북한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에 안광일 임명(9/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안광일을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임명됐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김정은 黨 제1비서, 한기범 교원의 80회 생일상(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과 김성근 미술가에게 70회 생일상(조선산업미술정보교류사)을 전달(9.14,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 흥남지구 공업부문(흥남비료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흥남전극공장) 사업 현지 요해(9.15, 중앙통신·중앙방송)
- '단숨에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적 기질이며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이라며 '김정은 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군대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단숨에의 기상으로 총돌격 속도를 최대로 높여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고 호소(9.17,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기여한" 조선인민 내무군 군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9.20, 중앙방송)
- 사회주의의 운명은 "반제계급의식의 견결성에 달려있다"며 全民의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수령결사옹위, 총대중시, 사회주의원칙 고수의 혁명적 입장견지" 추동(9.19,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경제개발구 세금규정 마련…외화 확보 노력(9/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경제개발구 세금규정을 채택했다"고 밝힘.
- 모두 11개 장, 72개 조로 구성된 규정은 경제개발구에서의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를 비롯해 세금 종류별 납부 의무와 과세 대상, 세율, 계산 방법, 감면 및 면제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규정은 경제개발구에서 세무사업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금의 부과와 납부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의미를 부여함.

■ '서핑천국 북한' (?)…파도타기 투어로 외국 관광객에 손짓(9/19, 텔레그래프)

- 1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투어스는 북한 관광 당국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8일간의 서핑 투어를 진행 중이라고 함.
- 미국과 중국, 독일 등 외국인 관광객 4명이 참가하고 있는 이 투어는 함경남도 마전해수욕장에서 진행되는 서핑 강습·체험 등의 일정으로 구성됐으며 일정에는 참가자들이 동해안으로 이동하기 전 평양에서 역대 북한 지도자들의 기념물을 참배하는 순서도 포함됐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함.
- 우리투어스는 중국 대표팀 감독을 맡은 이탈리아인 프로 서퍼를 지도자로 초빙했으며, 투어 참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도 서핑 강습을 진행했다고 소개했으며, 내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북한 서핑 관광패키지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함.

다. 경제 상황

■ 북한, 나선 선봉지구 공장들 홍수 딛고 생산 재개(9/17, 노동신문)

- 나선시 선봉지구의 거의 모든 공장이 홍수 피해 복구를 마치고 생산을 재개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함.
- 신문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큰물 피해를 입었던 선봉지구의 수십개 공장, 기업소가 빠른 시일에 피해를 가시고 생산에 들어갔다"고 전함.
- 나선종합식료공장 책임자와 노동자들은 홍수 피해 즉시 공장 설비 보수작업에 나서 24시간 만에 기초식품생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함.
- 이어 "이들은 기초식품생산을 내밀면서 자체의 힘으로 8일 동안 8천여㎥의 감탕(진흙)을 쳐내고 공장 구내의 꽃나무심기와 잔디밭 조성에 힘을 넣어 큰물(홍수) 피해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었다"고 신문은 알림.

■ 북한, 평양 대동강에 대형 수상 구조물 지어(9/19, 자유아시아방송)

-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구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양 시내 대동강변에 축구장 크기의 수상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멜빈 연구원은 "현재 절반 가량 완성돼 넓이가 3천595㎡ 정도지만, 여전히 많은 바지선이 물 위에 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완공 땐 최대 6천564㎡ 규모로 축구장 면적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지난 5월 중순의 위성사진에는 이 구조물 대신 대형 유람선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공사는 최근 2~3개월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중, 국경도시 잇는 다리 공동건설…경제교류 훈풍 불까(9/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남양-도문(투먼·圖們) 새 국경 다리의 공동 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15일 평양에서 체결됐다"고 보도함.
- 협정식에는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과 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했다고 통신은 전함.

■ "나진-하산 철도 석탄 운송량 첫 100만t 돌파"(9/17,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를 통한 러시아산 석탄 운송량이 처음으로 100만t을 넘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러시아 철도공사를 인용해 보도함.
- 러시아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북러 국경철도를 통해 운송된 러시아 시베리아산 석탄이 지난달 21일 기준 처음으로 100만t을 돌파했다고 방송은 전함.

■ 국제적십자-북한, 베이징서 회의…대북 지원 방안 논의(9/18, 미국의소리)

- 스웨덴 적십자사의 칼 토링 대변인은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는 27일과 2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측은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와 대응, 내년도 대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특히 지난달 북한 나선시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적십자사의 대응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도 논의할 것이라고 토링 대변인은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함.
- 이번 회의에는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중국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북한에서는 조선적십자회 간부 4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함.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한, 외국인에 페이스북·유튜브 접속 차단(9/17, 타스통신)

- 북한에서 외국인들이 이용해온 페이스북과 유튜브 접속이 차단됐다고 타스 통신이 16일(현지시간) 평양발로 보도함.
-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온 '별'이란 상호명의 회사는 현지 외국 공관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통신은 전함.
- 회사는 통지문에서 "북조선 정부 기관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포함한 위협과 중상의 글을 담은 인터넷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P2P 프로토콜을 통해 다운 및 업로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마. 사회 동향

■ 북한 고려항공, 공항 오가는 택시 서비스 운영(9/15, NK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고려항공 사무소에 게시된 '고려항공택시' 선전 포스터를 공개함.
- '고려항공택시 주문봉사 안내'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에는 고려항공에서 승객들을 위해 운영하는 택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용 방법이 소개돼 있다고 매체는 전함.

■ 북한 어린이 25% 빈혈 심각…발육장애도 많아(9/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워싱턴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18일 '2015년 세계영양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가 4명 중에 1명꼴로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보고서는 "지난 4년 간 빈혈을 앓는 북한 어린이 비율의 감소세도 느리다"고 지적하고 또 5세 이하 북한 어린이 28%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장애이며, 4%는 체중미달 상태라고 전했다고 방송은 인용하여 보도함.
- 보고서는 다만, 빈혈과 달리 발육장애와 체중미달의 개선 속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함.

- 제12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9월 15일 평양 능라도에서 시작(9.15, 중앙통신)
- 김정은 저작(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발표(2014.9.18) 1주년을 맞아 '청년중시는 수령님들께서 혁명영도의 전 기간 일관하게 견지해온 전략적 노선'이라며 '김정은이 이끄는 오늘의 시대에 노동당의 청년중시 정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주장(9.18, 중앙통신·노동신문)

ⓒ 북한연구실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9·19공동성명 10주년 계기 '북핵 세미나' 개최(9/14, 연합뉴스)

- 중국은 최근 6자회담 당사국들에 오는 18일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9·19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6자회담 당사국들을 베이징(北京)으로 초청해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공지함.
-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9·19공동성명 8주년인 지난 2013년 9월에도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북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그러나 2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각국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의 회의 참석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세미나는 9·19공동성명 10주년을 계기로 회담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된 의도로 읽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겨냥한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됨.

■ 美 국무부,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9/15, 연합뉴스)

- 존 커비 美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여러 개 나와있다."고 강조함.
- 커비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중국, 北 위협 겨냥 "긴장 조성 행위 말라"(9/15,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해 "긴장 조성행위를 하지 말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힘.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우리는 유관국(북한)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또한, 그는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의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마땅히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함. 이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다면 한·미·일은 물론 중국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 日 정부, 北미사일발사, 위성이라 불러도 안보리 결의위반(9/15,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탄도미사일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돼 있다."며 "위성이라고 칭하고 발사하는 경우라도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는 명확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함.
- 또한, 그는 "미국이나 한국과 확실히 연대하면서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의 자성, 또 그에 관한 안보리 결의나 6자 회담 공동선언을 존중하도록 촉구하고 싶다."고 강조함.
- 한편, 북한은 14일 공개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의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함.

■ 美 연구기관, 북한, 수소폭탄원료 획득 시도 가능성(9/16, 연합뉴스)

-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수소폭탄의 원료 중 하나인 3중수소를 획득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5일(현지시간) 영변 핵시설의 최신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5㎿급 원자로에 "북한 기술진이 방사선 조사

채널(irradiation channel)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후보들 중 하나가 3중수소"라고 지적함.

- ISIS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원자력연구원장' 직함을 가진 이가 출연해 2013년에 나왔던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의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MW 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 변경되었으며 재정비되어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는 발언을 상기한 데 대해 "북한의 소형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함.

■ 美, 북한에 "무책임한 도발 삼가라…핵보유국 인정 못해"(9/16,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에 이어 영변 핵시설 가동을 비롯한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라."고 압박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시설 가동 주장 등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은 무책임한 도발을 중단하고 대신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입장, 특히 역내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의 동맹국과 공유하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가 북한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언행도 삼가도록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고 강조함.
- 앞서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MW 흑연감속로가 정상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힘.

나. 미 · 북 관계

■ 美 전문가들, 북한, 다음 달 사이버 도발 가능성 있다(9/15, 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경고함.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이 연구소의 사이버 전문가인

스콧 라포이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작전: 전략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나와 이같이 밝힘.

- 차 석좌는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지만 다른 도발을 꾀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물리적 수단 이외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라포이 연구원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꾀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며 "목표물이 어떤 것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은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美 동아태 차관보, 북한 또다시 도발하면 실수될 것(9/16,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현대차-KF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와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3회 한미대화에 참석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이 국제적 제재로 이어지는 위협·도발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북한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러셀 차관보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활동도 금지돼 있다."고 밝힘. 또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함.
- 이어, 그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시한 경로이자 북한이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고 현실적 안보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도 이 같은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함.

■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김정은, 비핵화에 관심 없는 게 최대 문제(9/16, 연합뉴스)

- 9·19 공동성명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최대 문제"라며 "이는 이란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9·19 공동성명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로서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힐 전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합의사항을 공식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또한, 힐 전 대사는 “아버지 김정일은 매우 어려운 상대였으나 비핵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정은 정권의 경우에는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다시 확약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대화에 나설 신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케리, 북핵 위협 끝내려면 “경제제재 이상 필요할 수도”(9/17,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경제제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힘.
- AP통신 등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마이테 은코아나 마샤바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이러한 케리 장관의 언급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앞두고 최근 장거리 로켓에 이어 핵실험 카드까지 꺼내들자 나온 것으로, 만약의 사태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됨.

■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 지지 미국 내 여론 눈에 띄게 하락(9/17, 연합뉴스)

-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전국 성인 2천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민의 외교정책 관련 의식 조사보고서를 16일(현지시간)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미국 정부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들과 만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69%였음. 이는 탈레반(53%)과 하마스(56%)보다는 높지만, 쿠바(79%)와 이란(76%)보다는 낮은 수준임.
- 특히 7년 전인 2008년 양국 지도자들의 만남을 지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 같은 흐름은 북한 핵문제가 장기 공전하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피로감이 크게 확대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풀이하고 있음.

■ 트럼프, 이번엔 북한 향해 “미치광이가 핵사용 위협”(9/17,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16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근교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이란 핵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장거리 로켓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미치광이(maniac)"라고 비판함.

- 트럼프 후보는 우선 "이란 핵 합의는 끔찍하고 무능력한 것"이라며 "내가 지금까지 봤던 최악의 계약 가운데 하나"라고 혹평하며, 느닷없이 "누구도 미치광이가 앉아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과 두세 곳의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특히 북한이 그렇다."고 강조함.
- 이 같은 발언으로 봤을 때 트럼프 후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하면서 모종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 미국 남북관계 개선 흐름 훼방(9/17, 연합뉴스)

- 북한은 17일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 흐름에 미국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한을 향해 미국을 배제할 것을 촉구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최근 북남 사이에 적십자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준비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등 긍정적인 진전이 이룩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함. 대변인은 이어 "북남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공동보도문 이행을 공공연히 방해해 나선 미국의 비열한 책동은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 대변인은 "미국은 북남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북남관계에서 일관하게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언급하며, 남한을 향해 "미국의 압력에 눌리워 자주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북남 사이에 아무리 좋은 합의가 이룩되여도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 루비오, 북한 김정은 향해 "핵무기 수십 개 가진 미치광이"(9/19,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들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향해 "미치광이"라고 묘사함.
- 18일(현지시간) 미국 녹취록 전문서비스인 FNS에 따르면 루비오 의원은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열린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있는 바로 이곳(캘리포니아를 의미)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lunatic)가 북한에 있다.”고 밝혔음.

-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후보를 ‘외교 문외한’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관계 현안에 해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나왔음. 이는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미국 공화당 내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북한, 핵무기 사용 여부, 미국 행동에 달려있다(9/19, 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위협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선민족의 안전을 지켜내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구태여 언급한다면 그 모든 것은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위협함.
- 또한, 북한은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질량적으로 장성 강화됐다.”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그 어떤 요격미사일로도 불규칙적인 비행을 하며 기만 탄두까지 사용하는 우리의 탄도미사일을 명중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평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1962년부터 중국으로 기울어…美 CIA 대통령 정보보고(9/20, 연합뉴스)

- 북한이 1962년을 기점으로 소련과 멀어지고 중국 측에 확연히 기울었다는 당시 미국 정부의 판단이 공개됨.
- 이달 16일(현지시간) 기밀해제로 일반에 공개된 1961~1969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 일일 정보보고 문건에는 중-소 분쟁에서 한동안 ‘줄타기’를 하던 북한이 친중 노선으로 선회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음.
- 11월 27일 보고서는 “우리는 중-소 분쟁에서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을 피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온 북한이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첫 표시들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함. 또한, 바로 다음날 보고서에는 “조선(Korea·여기서는 북한을 가리킴)은 우리가 어제 시사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중국 편을 드는 쪽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일성은 흐루시초프에 대한 개인적 공격을 했다.”고 전함.

■ 성김, 평양이든 어디든 북한과 대화 용의 있다(9/20, 연합뉴스)

-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고 밝힘.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언급함.
-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어서 북한 측의 반응이 주목됨.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앞으로 방북 형식의 북·미 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뭇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다. 중 · 북 관계

■ 북중, 국경도시 잇는 다리 공동건설…경제교류 훈풍 불까(9/15,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남양-도문(투먼·圖們) 새 국경 다리의 공동 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15일 평양에서 체결됐다."고 보도함.
- 협정식에는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과 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했음. 북한이 근래 들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을 보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이번 협정은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한 이후 체결된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음.
- 지린성 일대 도시들은 북한-중국-러시아-몽골 4국의 경제 협력 중심지임. 이에 따라 '중국통'이었던 장성택 전 부위원장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현재 답보 상태를 보이는 나선·황금평 특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양국 정부 간 경제 협력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며 껄끄러운 북중 관계를 해소하는 데 촉매제가 될 지 주목됨.

■ 중국, 북한 수해복구 지원나서…"대북 화해 메시지"(9/16,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평양발 기사에서 중국 홍십자회(적십자사)가 전날

북한의 홍수피해 복구에 써 달라며 10만 달러(약 1억1천700만 원)의 기부금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함.

- 중국이 공개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약 3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짐. 중국 홍십자회는 2012년 1월 북한에 30만 위안(약 5천4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지원했으며 2007년과 2010년에도 수해복구용 물자 등을 지원한 적이 있음.
- 이번 지원은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이 냉각된 북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 리진쥔(李進軍) 주북 중국대사와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북한 중시 메시지를 피력해 왔음.

■ 중국 관영언론, "악순환 우려" 북한에 도발자제 촉구(9/16,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과거와 같은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함.
-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다음 달에 실제로 위성(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제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신문은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이 있어야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런 도박은 북한에 오랜 외교적 고립과 제재를 초래해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지적하며, 이어 한·미·일 대해서도 "북한의 불안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를 기본화법으로 삼아 북한의 저항을 억누르려고만 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냄.

■ 中 단둥서 내달 북중박람회…북한대표단 500명 참가(9/16,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간 종합박람회인 '제4회 중·조(朝: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이하 북·중 박람회)'가 내달 15~18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열림.
- 16일 중국 현지매체인 요녕일보에 따르면 이번 북·중 박람회에 북한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00명에 달하는 대표단을 파견하며 이 가운데 무역업체 100여 개, 직원 300여 명이 포함됨. 박람회는 두 나라 기업의 상품전람교역회, 북한문예

공연, 국제음식문화전, 북한미술전, 풍경사진전, 관광협력회의, 무역협력토의 및 투자의향서 체결 등으로 진행되며, 북한의 120개 수출·입 업체와 중국 각지의 2천여 무역업체 및 전문바이어가 참여해 구매 상담을 진행하고 북한시장 진출을 꾀할 예정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북·중 박람회 조직위는 "박람회는 지난 2012년 시작된 이래 풍부한 내용과 무역성과에 힘입어 '중국 10대 특색전시회'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며 양국의 무역협력 및 교류, 우의증진에 기여했다고 자평한 바 있음.

■ 북한, 올 들어 화교 100여 명 체포…中 친한기류 보복성(9/18, 연합뉴스)

- 홍콩 시사 주간지 아주주간(亞洲周刊) 최신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올해 들어 여러 화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최소 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화교 무역상 등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아주주간은 북한이 한국과 가까워진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내 화교를 숙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선양(瀋陽), 지린(吉林)성 내 북한과 인접한 동남부 일대에 거주하는 중국인 상당수가 북한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고 전함. 매체에 따르면 보위부는 수시로 북한 내 화교의 통신을 도·감청하고 있으며 중국 체류 시 언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짐.
- 한편, 북한 내 화교는 일본강점기 때나 그 이전 한반도에 정착한 중국인과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 들어온 중국인, 문화대혁명 시기 북한으로 도주한 중국인 등으로 분류되는데, 한 학자는 "한 국가 내 화교의 지위가 대(對) 중국 관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북한 내 화교의 암담한 처지는 북중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 왕이, "유엔결의 이행의무 있다."…'도발강행' 북한에 경고(9/19,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6자 회담 구성원들은 모두 유엔 헌장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
- 왕 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팡페이위안(芳菲苑)'에서 9·19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열린 북핵 세미나에 참석, 6자 회담 구성원은 모두 유엔 회원국이라며 이같이 말하였음. 또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국은 반도(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이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맞아 새로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 등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런 발언들은 직접적인 대북 경고 메시지로 풀이됨. 특히 왕 부장이 '유엔 결의'를 언급한 대목은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라. 일 · 북 관계

■ 교도통신, 北, 요코타 메구미 부모 평양방문 日에 타진(9/15,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씨 부모를 평양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북한은 작년 여름 이후 '메구미씨 부모에게 북한에서 손녀(김은경·메구미가 북한에서 낳은 딸)를 만날 기회를 주겠다.'며 초청 의사를 일본 정부에 누차 전달했다고 교도는 전함.
- 북한은 메구미가 결혼해 딸을 낳고 우울증을 겪다 1994년 4월 자살했다고 발표한 뒤 2004년 메구미의 것이라며 유골을 일본에 넘겼지만 일본 측은 감정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한편, 메구미의 부모는 메구미가 북한에서 낳은 김은경 씨와 작년 3월 몽골에서 처음 만났음.

■ 북한,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재침 야망 묵과 않겠다."(9/19, 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집단자위권법(안보법제)을 제·개정한 것에 대해 '재침 야망'이라고 반발하며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며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 또한, 대변인은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재침 야망에 사로잡혀 전쟁법을 끝끝내 만들어냄으로써 또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마. 러 · 북 관계

■ 나진-하산 철도 석탄 운송량 첫 100만t 돌파(9/17,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해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를 통한 러시아산 석탄 운송량이 처음으로 100만t을 넘어섰다고 러시아 철도공사를 인용해 보도함.
- 이는 북한의 대(對) 중국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가속화해나가는 것으로 풀이됨. 러시아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북러 국경철도를 통해 운송된 러시아 시베리아산 석탄이 지난달 21일 기준 처음으로 100만t을 돌파함.
- 앞서 러시아 철도공사는 올해 1~7월 북러 국경철도를 통한 전체 물류 운송량이 88만7천500t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배 늘어난 수치임.

바. 기타

■ 국제인권단체, 중국, 탈북자 보호해야…유엔 압박 필요(9/19, 연합뉴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보호하도록 유엔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HRW가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탈북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19일 보도했음.
- HRW는 성명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게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부속 의정서 당사국인데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취급하며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HRW는 비판함.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자국의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朴대통령, 25~28일 뉴욕 유엔개발정상회의·총회 참석(9/1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28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힘.
-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에는 160여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다자외교의 꽃인 유엔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 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다각적으로 펼쳐질 전망임. 특히 최근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박 대통령의 예방외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청와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선 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부대행사로 우리나라와 유엔개발계획(UNDP)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주최하는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하며, 같은 날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전해짐.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22일 위안부 기념비 결의안 표결(9/18, 연합뉴스)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오는 22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 건립을 시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표결키로 함. 만약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대도시 중 위안부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됨.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공공안전 및 지역서비스 분과위원회는 17일 오후 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에릭 마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심의한 후 이를 시의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함.
- 결의안의 명칭은 '샌프란시스코 시 겸 카운티가 "위안부들"을 위한 기념물을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분과위원장인 마 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계·중국계·일본계·라틴계·유대계·흑인·백인 등 다양한 인종의 시민들이 나와서 4시간 가까이에 걸쳐 찬반 의사를 밝혔음.

나. 한 · 중 관계

■ 한중일 정상회의 실무협의…서울개최 가능성 큰 듯(9/15, 연합뉴스)

-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정부의 부국장급 회의가 15일 오후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에서 열림. 3국 차원의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임.
- 3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장소 및 세부 준비사항과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또한, 3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월 말~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일자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주최국인 우리 측은 회의를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방침이 중·일 측에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임.

■ 中상무부 전문가, 한중FTA, 中동북 개방형 경제 촉진(9/17,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옛 공업기지인 랴오닝(遼寧)성 등 동북지방 진흥을 꾀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정식 서명된 한·중 FTA가 동북 진흥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17일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리광후이(李光輝)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총영사관 주최 '한·중 FTA 발전포럼'에서 "한·중 두 나라의 FTA 타결로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이 향상되고 이는 동북지방의 개방형 경제시스템 수립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중 FTA의 정식 서명으로 양국 상호혜택을 베푸는 과정에서 동종 산업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며 이것이 동북3성의 산업구조조정을 빠르게 유도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설명함.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동북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면서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 지린(吉林)성의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 등 지역발전계획 실현에 한국, 일본 등 주변국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양 소장은 "동북3성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남북경협 및 남·북·중 삼각 경제협력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동북에서 삼각협력이 실현된다면 교착 상태에 있는 단둥(丹東)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전망함.

다. 한 · 일 관계

■ 日 역사학자단체, 아베담화, 조선주권 침해사실 무시(9/14, 연합뉴스)

-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8월 14일 발표)에 대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사실을 무시했다."고 비판함. 또한, "담화는 일본이 19세기 구미제국의 식민지가 되는데 대한 위기감 속에서 근대화를 이루고 독립을 지켰다고 하면서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고 대만을 식민지화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함.
- 더불어 성명은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여성 일반의 전쟁피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 끝내고 있다."며 "이런 표현은 '위안부' 문제를 전쟁의 일반적인 문제로 취급해 일본 고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나 다름없다."고 꼬집음. 또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강제연행, 포로와 일반 시민 학살 등의 구체적 가해 사례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함.
- 그러면서 성명은 "이번 총리 담화의 기조는 독선적인 역사인식을 관철한 것"이라며 "아베 총리, 더 나아가서는 일본 정부의 불량한 식견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라고 일갈함.

■ 아베 총리, 한중일 3국 회담 실현될 때 한일 정상회담도 원해(9/14,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함.
- 아베 총리는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실현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각각 한일·중일 정상회담도 개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함.
- 아베 총리는 "각각 이웃 나라이므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더욱 전제조건을 붙이지 말고 개최해야 한다."며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함.

■ 日 언론, 강제동원기록 세계유산추진, 한일관계에 찬물 견제(9/14, 연합뉴스)

- 한국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것에 관해 일본 언론이 경계심을 드러냄.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4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신청을 결정하면 관계 개선의 기운이 생기고 있는 한국·일본 사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된다."고 평가했음. 산케이(産經)신문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역한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 유산 등재 후 한국과 일본에 강제성에 관한 인식차가 있었고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해 "한국은 징용의 강제성을 다시 세계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한편, 한국의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 33만6천797건을 문화재청의 '2016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 공모'에 예비 후보로 등록함.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후보를 선정해 내년 3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2017년 6~7월 무렵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

■ 주일대사, 산케이사장 만나 "'명성황후 칼럼' 삭제하라"(9/15, 연합뉴스)

- 유흥수 주일대사는 15일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산케이신문 사장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한 산케이 칼럼에 대해 항의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밝힘.
- 유 대사는 문제의 칼럼은 "이웃나라의 황후를 가장 잔혹하게 살해한 역사적 만행에 대해 반성과 참회를 하기는커녕, 스스로 그 사건을 거론했을 뿐 아니라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하는 등 폄하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또 "보도의 자유라는 미명 뒤에 숨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재차 악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사관은 소개함.
- 이에 대해 산케이의 구마사카 사장은 "해당 칼럼은 하나의 '논평'으로서 한국 국민을 비방·중상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답하며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한국 측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기는 어렵지만, 대사의 방문 취지와 내용은 편집국 등에 내부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짐.

■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 앞두고 내일 도쿄서 '위안부 9차 협의'(9/17,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제9차 국장급 협의가 18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힘. 이는 지난 6월11일 도쿄에서 8차 협의가 개최된 지 3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협상 파트너로 나섬.

- 당초 이번 협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차례지만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이하 안보법안)'의 참의원 통과 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 국내 사정으로 8차 협의에 이어 다시 도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협의는 오는 10월 말~11월 초께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됨.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의 결과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자위대 한반도파병 논란…아베 '부정' 불구 법률은 '모호'(9/20,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안보 법안 심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 법안 통과시) 법률상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는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함.
-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받은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권리로 즉, 아베의 말은 집단 자위권을 활용해 자위대가 지원에 나설 '제3국'에 한국도 포함된다는 것임. 이어 유사시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한 후속 질문에 아베는 "안 된다."고 밝힘. 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해상에서의 미군 후방 지원, 미국 군함 보호 등에 국한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해석함.
- 하지만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상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근거를 질문받자 아베 총리는 모호하게 대답하였고, 아베 총리의 답변에 대해 오가와 의원은 "법률에는 (한반도 파병이)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지 않다."고 꼬집었음.

■ 벳쇼 日대사, '높은 레벨' 회담기대…앞을 보고 나갔으면(9/20, 연합뉴스)

- 벳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는 20일 한일관계에 대해 "높은 레벨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벳쇼 대사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2015 인(in) 서울' 개막식 참석 후 연합뉴스 등 일부 기자들에게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과 한국이 앞을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함.

- 벳쇼 대사의 '높은 레벨'은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됨. 이 같은 언급은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께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中, "남중국해 건설공사는 정당" 美 비판 일축(9/14,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에서 진행중인 자국의 건설공사에 대해 "합리적이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미국 측의 비판을 일축함.
-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난사(南沙)군도(스프래틀리 군도)'와 부근 해역에 대한 논쟁의 여지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관련 섬과 암초에서 이뤄지는 건설은 합리적, 합법적인 것이며 완전히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 미국 펜타곤과 의회에서는 "인공섬 매립공정을 중단했다."는 중국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대중 비판론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군함과 항공기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음.

■ 백악관, 오바마, 시진핑과 회담서 해킹에 우려 표명할 것(9/15,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하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주 양국 간 고위급 사이버 안보대화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중국의 행위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그 행위가 우리의 경제와 국가안보에도 상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솔직히 평가해왔다."고 설명함.

- 앞서 미국에서 정부 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에 중국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 의혹이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음. 미국 정부는 해킹에 관여한 중국 기업·개인에 대규모 제재를 가할 계획이지만,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제재 집행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해짐.

■ 미국, 중국 북핵 세미나에 미국 관료는 불참(9/16,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9·19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핵 세미나에 미국 관료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힘.
- 캐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초청해 북핵 세미나를 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미국 정부와는 상관없는 민간 차원의 행사이며 미국인 비정부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뿐 미국 정부의 어떤 메시지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설명함.
- 중국은 9·19 공동성명 발표 8주년이었던 2년 전에도 6자회담 당사국 외교관과 학자들이 참여하는 북핵 세미나를 개최했으나, 이번에는 2년 전과 달리 각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한국에서는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이 세미나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임.

■ 오바마-시진핑, 25일 백악관서 미중 정상회담(9/16, 연합뉴스)

-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난다고 15일 밝힘.
- AF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2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 참석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해 25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임.
-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지난 2013년 6월에 이어 국가주석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만남에서 해킹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물론 미중 기후변화 대책, 양자투자협정(BIT), 북핵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시진핑 방미 앞두고 민주인사 궈위산 석방(9/16, 연합뉴스)

- 중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인권 운동가 궈위산(郭玉閃·38)을 전격 석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베이징의 민간 싱크탱크인 촨즈싱(傳知行)사회·경제연구소를 창설한 궈위산은 지난 14일 구금 11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자택을 돌아갔다고 VOA는 전함. 사회개혁 운동가이자 인권옹호가인 궈위산은 작년 10월 홍콩의 반(反)중국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공질서 문란(심흔자사죄·尋혼<다툴흔>滋事罪) 혐의로 베이징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1월 불법 경영혐의로 정식 구속됨.
- 이와 관련, 베이징의 유명 인권활동가 후자(胡佳)는 당국이 궈위산을 전격 석방한 것은 시 주석의 방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구속 중인 다른 인권 운동가와 민주 인사들도 석방하라고 촉구함.

■ 中, 미-중 정상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협력강화 논의(9/16,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기간인 25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대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힘.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6일 중국 외교부와 공공외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란팅(藍廳)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시 주석의 첫 국빈 방미 때 미국과 중국 양측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이란 핵문제, 반(反)테러 및 법집행 문제, 아시아태평양 협력 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미중간 상호 협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를 이란 핵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함께 지역의 '핫이슈'로 거론하며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양국 정상의 강력한 반대와 경고성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시진핑, 인권보장에 '최선'은 없고 '개선'만 있다(9/17, 연합뉴스)

- 시진핑 주석은 16일 열린 '베이징(北京)인권포럼'에 보낸 축사를 통해 "중국은 국정(국가현실)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인권 보장에는 '가장 좋은 것(최선)'은 없으며 '더 좋은 것(개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7일 전함.

- 이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빈 방미를 앞두고 나온 시 주석의 이 같은 견해는 미국 측의 잣대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시 주석은 이번 포럼이 세계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와 인권 진보를 주제로 열린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 인민이 일본 군국주의의 야만적 침략에 저항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큰 희생과 공헌을 했다."며 미국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음.

■ 시진핑, 중미관계 본질은 호혜공영…전략적 오판 피해야(9/18, 연합뉴스)

- 취임 후 첫 국빈 방미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측 인사들에게 "중미(미중)관계의 본질은 호혜 공영(윈-윈)"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제7회 중미 공상업계 포럼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단과 만나 "양국이 호혜 협력하는 것은 양국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 평화, 발전, 번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함. 또한, 그는 "일부 갈등이 있지만 크게 보고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함으로써 전략적 오판을 피해야 한다."면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통제함으로써 공동이익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이 같은 메시지는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대중 강경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측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과 갈등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됨. 한편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미에 대한 주요 키워드로 '전략적 상호신뢰', '경제무역 협력', '갈등 관리', '민의 기초', '책임의 공동부담' 등을 제시함.

■ 시진핑 특사, 美에 링지화 동생 송환 요구(9/18, 연합뉴스)

-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공안 총수가 미 정부에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동생 등 일부 비리 혐의자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 소식통을 인용,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이뤄진 미 정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링 전 부장의 동생 링완청(令完成)과 부동산 개발업자 궈원구이(郭文貴)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보도함.

- 멍 서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보안과 사법, 정보기술(IT) 관리로 구성된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해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정부 대표단과 만났다고 신문이 전함. 한편, 미국 측은 회의에서 중국이 범죄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협조하기 어려운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이들의 송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짐.

■ 美, 시진핑 방미 앞두고 중국에 도피사범 첫 송환(9/18, 연합뉴스)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자국 경제사범의 신병을 인도받았음.
-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18일 중·미 양국 사법기관과 외교 당국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14년째 도피행각을 벌인 비리사범 양진쥔(楊進軍)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힘.
- 중국이 도피사범을 유럽 국가로부터 송환받은 적은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용의자 신병을 넘겨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간 이번 협력은 중국인 정보요원들의 미국 내 활동을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 中, 미국기업에 '보안서약' 요구…해킹갈등 악화 가능성(9/19,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중국 진출을 꾀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치명적 제약을 줄 수도 있는 일종의 '보안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함.
-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 굴지의 첨단기술 기업들에 기업의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영업 중에 사용한 각종 고객 정보는 중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안서약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는 것임.
-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국가안보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양대 주요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서한은 최근 중국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보 관련 법안의 내용과 비슷함. 이는 미국 기업의 제품 관련 정보에 제3자(중국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해독 코드나 원시 코드를 중국 정부에 넘기라는 의미라고 이 신문은 풀이함.

■ 최초의 '사이버 군축협정'나올 전망...미·중 협상 박차(9/20,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평화시 상대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무기 선제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공간 군축'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신문은 양국 협상이 타결되면 최초의 '사이버공간 군축협정'이 될 것이라고 밝힘. NYT는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사이버공간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발전소나 금융시스템, 무선전화망, 병원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중국이 진원지로 지목되는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수백만 명의 공무원 인사자료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은 대부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한편, 협상에 관여하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양국 정상이 발표할 협정은 주요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공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최근 유엔에서 실무그룹이 채택한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시진핑 방미로 美中 경협 분위기 고조…남중국해 문제 해결 기대(9/20,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경협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음. 이는 시 주석이 시애틀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도 상호 기대가 높은 경협을 통해 사이버보안,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 양국 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힘.
- 20일 중국 중앙(CC)TV는 시 주석의 방미에서 경제무역합작이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양국 간 경협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함.
- 양국은 세계 최대 경제체로, 지난해 교역규모는 5천551억 달러로 전년대비 6.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또 지난해 말 현재 양국 간 상호 투자규모는 1천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시 주석의 방미는 양국 간 경협과 상호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바. 미 · 일 관계

■ 日 오키나와지사, 미군기지 신설 승인 취소하겠다(9/14, 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활용, 현내 미군기지 신설(이전)

공사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아베 정권과의 갈등이 한층 첨예해질 전망임.

-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沖繩)현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전임 지사 시절 이뤄진 헤노코(邊野古) 연안(미군기지 신설 대상 부지)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며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헤노코 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일본 정부는 매립 승인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불복 조치를 밟을 예정이어서 결국 소송전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하나되어 관계 법령을 따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공사를 강행할 뜻을 밝힘.

■ 日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미·영 '미소'…중국은 '눈살'(9/19, 연합뉴스)

- 일본이 해외 무력사용 등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길을 열어주는 집단 자위권법안을 19일 강행처리하자 미국과 영국은 미소를 지은 반면 중국은 눈살을 찌푸렸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법안이 통과된 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힘.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함.
-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안보정책 정비로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냐며 비판함.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 측이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지적함.

사. 미 · 러 관계

■ 미-러 외무 전화통화, 한반도 긴장해소 방안 논의(9/16,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힘.
- 외무부는 이날 내놓은 언론 보도문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통화에서 양측은 시리아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한반도 긴장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외무부는 이어 또 다른 보도문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역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으며 양측이 한반도 정세와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함. 한편, 러시아와 미국 측 외무 당국자 간 전화통화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내달 10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루어짐.

■ 미-러 국방장관 전화통화 시리아 사태 이견 좁히기(9/19, 연합뉴스)

- 시리아 문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 이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함.
-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날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힘. 국방부는 두 장관이 시리아 긴장 해소 방안과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IS) 격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함. AP통신은 고위급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두 장관은 양국이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IS를 격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하였음.
- 앞서 미 국무성은 18일 러시아에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군 당국자 간 회담을 제안했고, 러시아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측의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관측됨.

아. 중 · 일 관계

■ 中, 日 집단자위권법안 소위 통과에 우려 속 촉각(9/17, 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 여당이 17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우려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관영 언론들은 17일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일본 여당이 야당 의원들과 각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점을 집중 보도함. 관영 신화통신은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 총리 및 각료 문책 결의안 등의 방식으로 저항할 것이란 점을 부각시킴.
- 이와 관련,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서 아베 정권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본 국내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역사적 교훈을 새기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음.

■ 中, 日집단자위권법 통과에 "평화발전의 길과 배치"(9/19, 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이 만주침략을 시작한 '9·18 만주사변' 84주년 기념일 다음날인 19일 일본 의회에서 집단자위권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격앙하며 "평화발전의 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함.
-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의회가 집단자위권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맞는다."고 밝힘.
- 훙 대변인은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측이 전수방위 원칙(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역사적 연유로 인해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동향은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해온 사안"이라며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국내외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함.

■ 中, 일본군 위안부 기록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9/19, 연합뉴스)

-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쑤즈량(蘇智良) 상하이사범대 교수는 19일 난징(南京)대학살 사료와 함께 군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쑤 교수는 중국 국가당안국(기록물보관소)이 보관하고 있는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 운영, 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입증하는 기록을 추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라고 전함. 국가당안국은 이달 초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 (전승절)을 앞두고 위안부 관련 자료와 일제 전범 자백서를 잇따라 공개한 바 있음.
- 한편, 쑤 교수는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한국의 위안부 소녀상과 같은 중국의 위안부 소녀상을 판이췬(潘毅群) 칭화(清華)대 미술학과 교수가 조각을 맡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임.

자. 중 · 러 관계

■ 중-러 북핵담당 대표 회동, 한반도 정세·전망 논의(9/15,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의 북핵 문제 담당 대표들이 14일 (현지시간) 회동해 한반도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언론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를 만났다고 전했음.
- 두 인사는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 현황과 향후 전망, 동북아 지역 상황 등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외무부는 소개함. 하지만 면담 결과에 대해선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음.
- 이날 러-중 외교 당국자 간 회동은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이와 관련한 양국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음.

■ 러시아, '경제 둔화' 중국 의존도 줄이려 한다(9/16, 연합뉴스)

- 중국과 '신밀월' 관계를 과시해 온 러시아가 경제가 둔화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됨.

-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러시아·아시아 전문가는 서방국의 경제 제재 여파로 중국의 에너지 수요에 의존해 온 러시아가 계약을 다변화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함. 가부예프는 러시아가 베트남의 해외 에너지 사업과 무기 시장, 핵발전소를 포함한 기반시설 사업에 지분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가 중국이라는 바구니에 더 많은 달걀을 넣었지만, 남중국해 주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때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중국 서부 지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해짐.

■ 中 연변주 훈춘, '동북아 십자로' 무역중심지 부상(9/17, 연합뉴스)

- 중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훈춘(琿春)시가 '동북아 십자로'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역내 국가들의 상호 무역 중심지로 떠오름.
- 17일 신화망과 길림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훈춘시는 북한, 러시아와 연결되는 4개 국가급 통상구를 확보하고 도시에서 반경 200㎞ 내에 북한 나진항, 러시아 자르비노 항 등 10개의 항구가 있는 점을 활용해 한국 등 동아시아 각국의 화물을 유통시키고 있음.
- 지난 5월 훈춘철도통상구를 통해 러시아산 철가루(鐵粉) 3천100t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들여오는 등 올해 총 50만~100만t을 수입할 계획이며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했으며, 지난 6월에는 훈춘(중국)-부산(한국)-자르비노(러시아)를 잇는 3개국 간 철도·해운 연결항로를 통해 첫 쌍방향 운수를 실현함. 이 항로를 통해서는 한국의 컨테이너 화물이 처음 중국·러시아로 수출되기도 함.

차. 일 · 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북인권법안, 전쟁국면으로 되돌리려는 도발"(9/17,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6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남북 당국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한 것은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맹비난했음.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남조선 국회가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해내려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되돌려세우는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음.
- 대변인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때 남조선 국회가 북인권법 조작 소동에 광분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라고 핏대를 세웠음.
- 이어 "북인권법을 떠들어대는 그 입으로 그 무슨 남북 국회 회담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화 상대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합의이행과 관계개선,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치졸한 여론 기만극"이라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북인권법 조작 책동과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선전포고로 보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며 "남조선의 여야당과 당국자들은 북인권법 조작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를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음.
-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는 최근 북한인권재단 설치,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북한인권법안 핵심 쟁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고 미타결 쟁점은 여야 지도부 간 협의로 넘기기로 했음.

■ 벨기에 NGO "북, 인도주의 위기국"(9/17, 자유아시아방송)

- 전 세계 국가들의 인도주의 상황과 필요를 평가하는 벨기에 비정부기구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17일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했음.

- 이 기구는 이날 '국제 위기 평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세계 국가들의 식량 사정, 안보, 정치, 인권 상황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기 상황을 평가해 지난 6개월간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이 들어온 국가들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을 분류했음.
- 이 기구는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지적한 주요 원인으로 북한 전체 인구의 7% 가 인도주의 위기로 영향 받고 있는 가운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꼽았음.
- ACAPS는 "북한을 향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접근 가능성(humanitarian access)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전했음.
-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 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려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북한의 지원 대상 마을에 대한 접근, 지원 결과 평가 그리고 분배 감시 등에 대한 제한을 너무 심하게 둬 대북 지원 환경이 열악하다는 설명임.

■ 북, 해외파견 근로자들 월급 안 줘(9/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당국이 노동당 창건 70돌을 경축하기 위한 "충성의 외화벌이"운동을 강요하면서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몇 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말했음.
- 14일 중국현지에 근로자로 파견된 한 북한 주민은 "벌써 넉 달째 약속된 생활비(월급)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밀린 로임(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없어 주변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외화벌이 대표단으로 파견됐다는 이 주민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북한 여성근로자들이 120여 명이나 된다며 그들은 북한을 떠날 때 자체로 준비한 약품이나 생필품, 화장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음.
-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등지의 공장 노동자였다 선발되어 파견된 18세~23세까지의 이곳 여성들은 애초 한 달에 1백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초 중국에 오게 됐다며 하지만 5월에 중국인민폐 1백 위안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 받은 로임(월급)의 전부라고 그는 말했음.
- 또 지난 8월에는 여성근로자 9명이 로임이 지급되지 않는데 항의해 일을 거부하고 현장 간부를 찾아가 약속이행과 집에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보위지도원이 즉각 '심판총회'를 열었다고 현지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그는 전했음.

- 보위지도원은 총회에서 “지금 공화국(북한)에서는 당 창건 70돌을 빛내이기 위해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여 가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고 있다”며 “너희는 하루 세끼 기름진 이밥을 먹는 것을 다행인 줄 알라”고 소리쳤다고 그는 언급했음.
- 특히 담당보위원은 “너희들이 돌아가겠다면 곱게 집으로 갈 것 같으냐?”며 “조국에 헌신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노동단련을 거쳐 감옥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협박해 겁에 질린 여성노동자들이 곧바로 현장근로에 복귀하게 됐다고 그는 설명했음.

■ “미, 북 수용소 인권 침해자 제재해야”(9/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국의 인권단체 ‘노체인’이 공동으로 발간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최신 보고서 발표회가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음.
- ‘숨겨진 수용소 IV: 성적 탄압과 수감자 실종(The Hidden GulagIV: Gender Repression and Prisoner Disappearances)’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데이빗 호크(David Hawk)씨가 2003년 처음 저술한 ‘숨겨진 수용소’의 제4편임.
- 보고서 발표회에 이은 토론회에 참석한 로베르타 코헨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은 북한 당국이 유사시 수용소 수감자를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음.
- 코헨 공동의장은 따라서 수용소 내 인권유린 가해자의 이름을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음.
- 코헨 공동의장은 북한 당국이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고 한편으로는 현재 북한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반 인도적 범죄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음.
- 호크 씨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수용소와 관련한 두 가지 최근 변화를 기술했다고 밝혔음.
-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이 같은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지난해 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후, 북한이 지난해 10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처음으로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자 처벌 여론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임.

- 정 대표는 그러나 북한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서림천 혁명화 구역은 지난해 10월 방북 제안 이전에 이미 해체된 것으로 상업위성을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음.

■ 모잠비크 파견 북한의사 6명 '추방'(9/18, 자유아시아방송)

-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Mozambique)에 파견돼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펼치던 북한 출신 의사 6명이 최근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음.
- 현지 언론매체인 잠베(Zambezi News)지는 지난 달 13일, 모잠비크 보건부가 지난 7월 2일 북한의사 6명과의 계약을 예정보다 일찍 종결하고 그들에게 최대한 빨리 모잠비크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음.
- 이에 대해 현지 소식통은 보도가 나간 뒤 추방권고를 받았던 북한의사 6명이 2주 전쯤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음.
- 특히 모잠비크 내 가자지구(Gaza Province)에 있던 전창호라는 이름의 북한 정형외과의사는 부실치료와 금전착취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던 것으로 알려졌음.
- 이번 북한의사 추방 건은 국제의료시민단체인 퐁가(FONGA)가 모잠비크의 나지라 압둘라(Nazira Abdula) 보건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창호를 비롯한 북한의사들의 잘못된 의료행의를 고발, 추방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음.
- 탄원서에 따르면 모잠비크 내 북한 의사들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갈취했으며, 병원이 아닌 비인가 시설인 의료진의 자택에서 진료 및 시술을 하는가 하면, 시간 단축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을 시술에 참여시키기도 했음.
- 전 씨는 수술을 다른 환자보다 일찍 해 주겠다며 소위 '급행료'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병원 내 관리 소홀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었고, 향정신성 의약품과 각종 불법약품의 오남용은 물론 불결한 환자의 차량에서 시술을 하면서 의료용 붕대 대신 여성용 위생용품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음.
- 심지어 임산부 제왕절개 시술 과정에서 신생아의 신체를 훼손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했다는게 이 시민단체의 주장임.
- 북한이 비동맹외교를 강화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경제교류와 함께 의료진 파견을 강화하고 있지만, 낙후된 의료기술과 불법 의료행위로 의사가 추방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음.

■ 북한, 남한 북한인권법안 제정 추진에 강력 반발(9/20, 연합뉴스)

- 북한은 여야가 일부 합의안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연일 거센 비난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청년근로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요람을 해치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안을 비난했다고 보도했음.
- 대변인은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모략소동에 발광하는 것은 실로 가소롭고도 파렴치한 망동이며 추악한 대결적 정체만을 낱낱이 드러낼 뿐"이라고 강조했음.
- 대변인은 또 "북 인권법을 조작해보려고 책동하고 있다는 보도에 접한 우리 500만 청년전위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음.
- 그는 나아가 "오늘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남조선이며, 특히 청년들의 초보적인 지향과 요구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암흑사회는 다름 아닌 남조선"이라고 역공을 퍼부었음.
- 대변인은 "남조선에서는 청년대학생의 80% 이상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노동현장에서 고역의 피땀을 흘리고 생체실험에까지 몸을 내맡기고 있다"고 주장했음.
- 앞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를 통해서도 대변인 담화를 내는 등 북한 인권법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2. 북한인권

■ 북한 인권 '접촉 그룹' 신속히 진행해야(9/14,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북한인권협회는14일 '북한 인권 콘택트 그룹'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내고 "현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 중 이행된 사항은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의 설치' 단 한 개 뿐"이라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 인권 콘택트 그룹'의 형성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권고사항이며 이를 중장기적 정책 목표로 잡고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외교 수장의 모임인 '북한 인권 콘택트 그룹'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같은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음.

- 또 10개 회원국 이하가 참여하는 '북한 인권 콘택트 그룹'은 장기적으로 지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내에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 이어 콘택트 그룹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지역 내 공감대를 끌어내는 역할 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들의 참여 또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음.
- 비정부 기구들은 우선 인권 유린의 희생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권 유린의 희생자들이 '평화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임.
- 즉, 탈북자들과 연관된 비정부기구들이나 탈북자의 참여를 콘택트 그룹에 끌어낸다면 북한을 둘러싼 지역 긴장 해소와 평화 통일에의 과정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임.

■ 영 "유엔 통한 대북 인권개선 압박해야"(9/14,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외교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14일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기록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실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음.
- 그러나 북한은 전혀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지적했음.
- 스와이어 부장관은 고통 받는 북한 내 인권 유린 피해자를 국제사회가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지난 6월 한국의 수도 서울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할 유엔 인권사무소가 설치된 것을 환영했음.
- 한편,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개막인사에서 유엔 인권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감시하고 유엔에 보고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의 카지 미사코 대사는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결을 호소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 공식일정으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의 사회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4명의 전문가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한-EU, 北 핵·미사일 개발 강력 규탄…인권 개선 촉구(9/15, 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북한 정세와 관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음.
- 박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음.
- 양 정상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해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한 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
- 또 북핵 6자 회담재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양측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는데, 지난해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으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음.
- 특히 양측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안전과 후생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확인했음.

■ "북한 해외노동자 '노예노동' 개선 국제사회 나서야"(9/16, 연합뉴스)

- 북한 정권의 외화 획득 수단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고용 국가와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갖는 것은 자유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이들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 윤 소장은 그러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예 노동'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노동조건 하에서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인권 단체 등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날 토론회에서 2000년대 이후 중동 국가에서 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는 한 탈북자는 "냉난방과 방역이 되지 않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무더위 속에서 하루 16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음.
-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 때문에 신원 공개를 거부한 이 남성 탈북자는 "근로계약서는 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임금은 숙식비 등을 떼고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음.
- NKDB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계약상 임금의 약 10% 정도만 손에 쥘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북한 정권에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음.
- 현재 북한은 약 16개국에 5만~6만 명의 노동자를 내보낸 것으로 추산됨.
- 윤 소장은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중국, 러시아, 중동 지역 국가들은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해외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급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 국제 NGO 등이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할 것을 제의했음.
- 벨기에의 인권단체 '국경없는인권'(HRWF)의 빌리 파트르 소장은 북한 노동자 고용 국가와 북한 정권에 대해 구체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파트르 소장은 고용 국가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여권과 비자를 소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현지법과 국제기준 위반 여부를 감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유엔과 유럽연합(EU)은 북한 정권의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인도네시아서 2차 북한인권주간 개막(9/16, 미국의소리)

-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15일 제 2차 북한인권주간이 개막됐음.
-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인 엘삼 (ELSAM)이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엿새 동안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와 그림 전시회, 음악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림.

-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단장인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인도네시아에 북한인권 참상을 알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들의 역할을 부각” 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조연설을 맡은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통해 확인된 북한 내 반인도 범죄의 참상을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음.
-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 년 전부터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행사하며 북한 정부에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계속 촉구하고 있음.
- 김석우 전 차관은 이날 행사에 특히 인도네시아의 많은 주류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혁 씨와 화가이자 팝 음악가로 활동하는 강춘혁 씨 등 탈북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남북한에서 누리는 자유의 극명함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김 전 차관을 전했음.

■ 정부 “北, 인권법 비난만 말고 인권개선 노력해야”(9/17, 연합뉴스)

- 정부는 17일 여야가 일부 합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이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맹비난한 것에 대해 북한인권법을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이번에 그런 심각성에 여야가 공감해 (북한인권법)제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북한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비난만 할 것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들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전날 대변인 담화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회담을 앞둔 이때에 남조선 국회가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해내려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되돌려 세우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시설 점검단이 금강산을 방북한 것과 관련 "(금강산 시설의) 상태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수리하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확인하고 계획을 짜서 올 것"이라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서는) 수리보수팀이 (한 번 더)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유엔, 21일 북한인권 패널 토론회 개최(9/19, 연합뉴스)

- 인권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9일 밝혔음.
- 마이클 커비 전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북한 인권 패널 토론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라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상황 보고서의 저자인 미국 인권운동가 데이비드 호크가 패널로 참가함.
- 또한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17명의 일본인 납북자 중 한 명인 다구치 야에코씨의 아들인 일본 납북가족협회 이이즈카 고이치로 사무부총장과 한국의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권은경 사무국장도 패널로 나섬.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부대행사가 아닌 본회기 내 공식 일정으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해 열리게 됐음.
-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주요 토의 주제로 하며 그 외 북한 인권상황도 함께 논의됨.

3. 탈북자

■ HRF, 장애인 탈북자 위한 모금운동(9/16, 자유아시아방송)

- 의족을 한 채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힘겹게 인권 운동에 전념하는 '나우'의 지성호 대표에게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 주기 위한 성금이 차곡차곡 늘고 있음.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Alex Gladstein) 부사장은 한 달여 만에 목표액 5만 여 달러의 70퍼센트 가량이 모아졌다고 전했음.
- 지난 4월 한국 방문 당시 지 대표가 설립한 인권단체 '나우'의 사무실이 계단이 많고 환경이 열악한 것을 본 '휴먼라이츠재단'의 관계자의 제안에 따른 운동임.
- 따라서 이번 운동의 제목은 지 대표의 험난한 탈북 여정 '6천마일' 즉 '1만 킬로미터'를 상징하는 '자유를 위한 6천마일'임.
-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이번 모금운동에는 한국, 미국,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등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참가했음.
- 함경북도 회령 탄광마을에서 태어난 지 대표는 한밤중에 석탄을 운반하던 기차에 올랐다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선로에 떨어져 다리를 잃었다고 함.
- 1990년대 식량난으로 가족이 아사 직전에 이르자 석탄을 훔쳐 연명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던 것인데, 지 대표는 사고 후 마취도 없이 진행된 악몽 같은 수술, 처참한 굶주림, 그리고 장애인이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당한 모진 고문 등에 대해 증언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음.

■ 국제인권단체 "중국내 탈북자, 난민 인정해야"(9/20, 뉴시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20일 중국정부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음.
- 존 피셔 휴먼라이츠워치 국장은 휴먼라이츠워치와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캠페인(ICNK)'의 공동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국에서 북송한 탈북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모든 북한 사람들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피셔 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 수많은 납북과 강제북송이 벌어졌다. 북한 요원들은 중국 거주 중국인과 한국인들을 납치했고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송했다"고 설명했음.

- 그는 “중국 정부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의 북한주민들을 일괄적으로 불법 경제이민자로 규정하고 계속 북송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피셔 국장은 북한당국에는 “북한 정부는 북한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중단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국제사회가 난민 보호와 정착 원조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그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정부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게끔 인권이사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4. 이산가족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9/15, 자유아시아방송)

- 남북이 15일 오후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주고 받았음.
- 의뢰 명단은 남측이 250명, 북측이 200명으로, 남측이 북측보다 50명이 더 많음.
- 이는 남북이 지난 8일 적십자 실무접촉 때 합의했던 것으로 남측이 국군포로를 중심으로 이산가족 50명을 더 뽑았음.
- 남측의 일반 이산가족은 지난 9일 선발한 상봉 후보자 500명 가운데 건강 상태와 상봉 의사 등의 확인을 거쳐 선발했음.
- 남측의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이번에는 대부분 고령자가 많이 들어갔다”며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음.
- 남북은 가족의 생사 확인 등을 거친 뒤 10월 5일 결과회보서를 주고받게 됨.
- 그런 다음 대상자들의 상봉 의사와 건강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10월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교환할 예정임.
-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씩 두 차례에 걸쳐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뤄짐.
- 하지만 최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시사해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임.

■ 미 이산가족, 남북 외교관 초청해 북한서 반출한 누나 유골 안장(9/15, 미국의소리)

- 여든이 훌쩍 넘은 아들은 64년 만에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리게 됐음.
- 1951년 서울에서 인민군에 이끌려 북한으로 넘어간 누나의 흔적을 마침내 어머니 곁에 누일 수 있게 된 것임.

- 미국 중북부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문재 씨는 지난해 북한에서 가져온 누나의 유골을 다음 달 31일 일리노이주 다리엔 시에 있는 가족 묘에 안장할 것이라고 밝혔음.
- 박 씨의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10년 전 9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음.
-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이름을 불렀던 어머니와 누나의 재회를 성사시켜야 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박 씨의 몫으로 남았음.
- 박 씨는 지난해 5월 10일 평양 만수대 인근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누나 박경재 씨의 유골 일부를 북한에서 미국으로 직접 옮겨왔음.
- 쉽지 않은 요청이었지만 북한 당국은 뜻밖에도 정성스레 준비한 유골함을 들고 방북한 박문재 씨에게 유골 반출을 이례적으로 허가했음.
- 북한에 살고 있는 누나의 가족으로부터 양해를 얻어 절반 가량의 유골만 얻은 박 씨는 지난 1년여 동안 유골함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왔음.
- 파란만장한 가족사를 담을 묘지 동판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어렵게 재회한 누나를 곧바로 떠나보내기 어려웠기 때문임.
-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 협주단 가수로 차출됐던 박문재 씨의 누나 박경재 씨는 이후 폴란드와 체코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북한 피바다가극단 전속 소프라노로 활동하다 지난 1995년 44년 만에 평양에서 동생과 재회했음.
- 꿈에도 그리던 상봉의 기쁨은 그러나 누나 박경재 씨가 3년 전 80살로 세상을 떠나면서 17년 만에 끝났음.
- 어머니가 안장된 미국의 가족묘에 누나를 함께 묻고 싶었던 박 씨의 소망은 10년 넘게 의료 봉사를 하며 인연을 맺은 북한 당국자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뤄졌음.

5. 납북자

■ 유엔, 北 인권·납북자 문제 해결 나선다(9/15, TV조선)

-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UN 인권이사회 30차 회기에서는 북한이 자행한 전후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짐.
- 그동안 고문 구금 수용소등 9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납치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임.
-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모임 대표도 참여함.

- 북한은 일본이 자신과의 약속을 휴지처럼 버리고 미국의 날조극에 동참했다고 비난했음.
- 납치문제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에는 한국인 피해자뿐 아니라 다국적 피해자 수 백 명이 지금도 사실상 강제 억류상태임.
- UN은 지난해 11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최고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권고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중국, 북한 수해복구 지원 나서…"대북 화해 메시지"(9/16, 연합뉴스)

- 중국이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은 북한에 억대 기부금을 보내는 등 대북 화해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평양발 기사에서 중국 홍십자회(적십자사)가 전날 북한의 홍수피해 복구에 써 달라며 10만 달러(약 1억1천700만 원)의 기부금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음.
- 기부금은 주북 중국대사관이 중국 홍십자회를 대신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에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했음.
- 북한은 지난달 22~23일 제15호 태풍 '고니'가 나선시를 강타하면서 주민 40여 명이 숨지고 1만1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1천여 채가 파손됐음.
- 중국이 공개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약 3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 홍십자회는 2012년 1월 북한에 30만 위안(약 5천4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지원했으며 2010년과 2007년에도 수해복구용 물자 등을 지원한 적이 있음.
- 이번 지원은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이 냉각된 북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중국은 최근 리진쥔(李進軍) 주북 중국대사와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북한 중시 메시지를 피력해 왔음.
- 이런 가운데 양국은 전날 두만강을 사이에 둔 국경 도시를 잇는 다리를 함께 건설하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 강화 의지도 피력해 주목을 받았음.
- 다만, 중국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 카드로 위협수위를 높인 데 대해서는 전날 "긴장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등 강경한 태도도 보이고 있음.
- 중국 관영 언론은 현재의 북중 관계에 대해 "비교적 미묘하지만 양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음.

8. 북한동향

■ 北「조평통」대변인 담화(9.16), 우리 국회의 '북인권법' 통과 추진을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되돌려 세우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반발 및 '단호한 대응' 천명(9.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지금은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이 일정에 오르고 북남 당국사이의 회담도 앞두고 있는 때,
- 남조선 국회가 북인권법을 조작해 내려고 책동하는 것은 우리 체제를 전면부정하고 반공화국 대결을 격화시켜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되돌려 세우는 용납 못할 도발임.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